

# 진부한 선거보도 프레임 여전 '시민의 현명한 선택' 강조했지만 유권자 알 권리 보도 충분했나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김보영

---

모니터 기간: 2024년 3월 4일(월)~4월 9일(화)

모니터 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 KBS부산, 부산MBC, KNN 저녁 메인뉴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총선 보도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40일간 부산지역 5개 언론을 모니터링 하였다.

**시민이 원하는 선거보도,  
유권자 선택에 도움 주는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선거공보물 수준의 공약보도는 이제 그만!**

유권자 입장에서 유익한 선거보도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주는 보도일 것이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예를 들면 후보 간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정보가 잘 담겨있거나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가능한지를 관련 전문가의 진단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려준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지역의 쟁점과 현안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역할, 각 후보자들의 공정선거 감시와 지역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등 모두 지역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선관위 공보물 수준의 공약을 단순나열하거나 논란과 정쟁을 그대로 또는 과도하게 전달하여 오히려 정치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2대 총선보도, 지역언론은 달라졌을까?

**22대 총선, 정권심판 양강구도 형성으로 정책선거 한계 존재  
선거 발생이슈 좇기만 한 지역언론도 공약검증보도 부실  
국회의원 선거중요성, 유권자 권리강조 등 선거의미 짚는 선제적 기획 필요**

2024총선미디어감시연대에 따르면,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는 그간의 구태적 선거보도관행과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선거에서는 별도 기획을 통해 검증에 나서거나 유권자 의제를 적극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보도에서는 주목할만한 기획을 찾기 어려웠다. 물

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강력한 선거연합으로 양강구도 형성, 늦어진 선거구 획정 등 정책과 공약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다보니 선거발생이슈 위주로만 선거정보를 전하는 지역언론 역시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내실있는 보도는 드물었다.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 비전 등을 지역구별 또는 주제별·키워드별로 묶어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했지만, 후보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하는데 그쳐 언론의 자체적 분석·해석은 부족했다.

늦어진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도 여야 간 셈법으로 낙장 결정한 국회비판,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후보자 혼란 강조, 부산 총선 판세 유풍리 분석에만 집중할 뿐, 유권자입장에서의 알권리 침해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선거구 문제를 지적하는 지역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다. 그간 지역언론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중요한 지연현안으로 짚었지만, 정작 선거구획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문제, 즉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리적 요건, 생활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고 지역언론이 독단적으로 선거보도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의 입만 바라보며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의 선거보도는 유권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제적인 ‘기획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지역 현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공약이행, 법안발의, 국회출석률, 지연현안 해결력 등) 공개 등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보도 등은 변수가 많은 선거발생이슈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획보도인 것이다.

### **반복되는 진부한 선거이슈별 프레임, 22대 총선보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천·경선 보도 ‘갈등부각’, 후보 보도 ‘구도·승패만 부각’, 선거운동 보도 ‘행보·전략 부각’** **특히 격전지 위주 보도, 유권자 알 권리 제한**

정당 공천·경선, 후보등록, 선거운동 시작, 사전투표 등 선거일정별 보도에서도 그간 지적되었던 진부한 보도프레임은 여전했다.

각 정당의 공천·경선이 진행되는 시기, 대부분이 공천 갈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천 갈등에 대한 원인을 짚기 보다는 갈등상황만 전달해 본격적인 선거시기 전부터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당의 공천과정도 유권자에게는 평가 대상이다. 단순한 공천 결과 나열보다 각 당이 내세웠던 공천의 기준에 따라 후보가 정해졌는지, 공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천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짚어주는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더 의미 있는 선거정보일 것이다. 공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절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없이 당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는 유권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 이후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 보도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기획보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후보의 행보를 좇는 보도와 1호 공약,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단순공약나열' 보도가 많아 '공약 검증'보다는 '공약 받아쓰기'에만 그쳤다. 또 '수성', '탈환'과 같은 대결구도를 강조하며 격전지 위주 후보자 소개와 함께 선거구도에 따른 전략을 전했다.

지역언론은 이번 총선에서 특히 주목받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조명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접전지역이거나 유명세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하는 지역을 '격전지'로 선정해 우선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보다는 '후보자 중심'의 대표적인 선거보도 유형이다. 소개되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린 지역구의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이 멀어지거나 선거보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 '5선 중진의원', '전직 도지사', '장관 출신' 등으로 후보의 경력을 소개하며 해당후보의 경쟁력을 알리는 보도도 많았다. 제대로 된 후보 경쟁력을 소개하는 보도라면 해당 관직을 수행했을 때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지역을 위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얼마큼 공약을 지켰는지 등으로 해당후보의 경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장관직 자체로 후보를 이미지화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 거대양당 위주의 기울어진 정당보도

### 국민의힘 편향보도 지적 다수, 비례정당 소개에는 소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더더지고 갈등이 노출되면서 언론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부산 지역신문은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식이 1면에 게재된 것과 달리,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소식은 주로 4,5면에 배치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부산 현역 초선의원이 대거 탈락했는데, 부산일보는 부산에 쇠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은 재산, 중진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 있음에도, 부산일보는 외려 쇠신 바람이라고 해석해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기사는 적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비명 회사'나 '문·명 충돌'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갈등에 더 주목했다.

또 여야지도부 부산방문을 두고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 지역신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방문을 1면에 보도하며, '구름 인파',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보도량 및 주요면 배치에서 차이를 보였고,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이 대표의 입장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힘은 세걸집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을, 민주당은 지역현안 해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수의 신생정당이 있고 비례후보만 내는 비례정당도 다수여서 유권자의 혼란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다. 물론 38개나 되는 비례정당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원내정당 또는 일정 지지를 이상 정당들의 주요 공약이나 후보군을 알려주며, 유권자 혼란 우려하여 언론이 나서서 비례정당 소개하는 것은 필요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

택' '공약과 후보 면면을 꼼꼼히 따져보는 유권자의 지혜'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기사는 부족했다.

### 선거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여론조사 보도

#### 지역의제 묻는 설문문항 유권자 선택지 제한 우려

####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지 필요성과 정확성 고민 필요

지역언론의 선거보도 중 가장 주목받는 보도는 아마 여론조사 보도일 것이다. 전국적 관심 지역구를 제외하면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판세를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털노출도도 높고, 인용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사의 효용성이 큰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기에 선거마다 지역언론이 주력하는 보도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보도는 아니다. 후보지지율과 '승패'에만 집중하여, 지지율을 단순 나열한 경마식 보도 위주이기도 하고, 단 한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 '주류 여론'인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 지역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주도하는 대형건설사업 현안이 주요 정책으로 제한되어 제시되거나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정책이 꼽힐 수밖에 없는 질문지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또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에 순위기를 매기거나, 세대별·연령별 하위 집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부산일보는 오차범위내 여론조사 결과에 '1위' '2위' 순위를 매기며 오류를 보였다. 국제신문은 KBS와의 공동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응답자의 특정 연령대와 정치성향만 따로 분류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2030' 응답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으며 이들이 접전지에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는데, 이는 하위 표본의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하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어긋난 보도이기도 했다.

### 여전히 부족한 유권자 의제보도

#### 선거시기 균형보도? 후보자와 유권자 보도 균형 우선해야

후보자의 출마의 변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제안하는지 주목하여 공론화하는 것도 지역언론이 선거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지역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밀착형보도, 다시 말해 유권자 의제의 확장도 필요하다. 이른바 '불공정한 뉴스'는 의도적 이슈의 누락 또는 축소도 있지만 해당 이슈의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균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과 공약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제와 관점의 다양성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번 선거에도 지역언론은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묻는 기획보도를 일부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부산 유권자와 단체가 제안하는 공약을 순위를 매개 소개하는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톱 10' 기획보도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톱10'에 뽑힌 공약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글로벌허브도시법 제

정,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시와 상공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었다. 부산일보는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통공약 질문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등 상공계 요구가 반영된 문항만 포함시킨 바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기후위기 대응, 원전·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민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의제 등 다양한 총선의제를 제안했지만 지역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선거보도에서 후보자 간 보도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보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보도도 균형감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가 아닌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공인 유권자의 발언과 요구를 더욱 과감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주길 지역언론에 당부한다.

### **품질높은 선거보도 부족, 지역언론의 열악한 제작환경도 한 몫 그럼에도 노력 빛난 유권자에 유익한 선거보도 눈에 띄어**

부산 18곳 여야 후보 대표공약을 3개씩 받아 경향성 분석하고 이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던 국제신문. 부산 유권자로부터 제시받은 79개 공통 공약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총 28명의 부산 여야 후보가 응답한 내용을 전한 부산일보. 지역구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묻고 입장을 소개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KBS. 지역민의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그 결과를 지역의제로 제안하고 기초지자체장의 관권선거를 물증을 통해 고발한 부산MBC. 유동인구 많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사전투표소 부재 문제점을 알리 KNN.

유권자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선거정보를 기준으로 모니터를 진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쓴소리가 많은 것이 부산민언련 보고서의 특징이다. 그리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역언론의 취재여건과 제작환경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독자와 시청자는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줄 위와 같은 유익한 선거보도들이 더욱 소중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해 언론의 진지(陣地)를 힘들게 지키고 있는 지역언론인들을 부산민언련은 항상 응원한다.

<끝>